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 농협 개혁과 경제사업 활성화의 출발점 돼야

신임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협 개혁의 중대한 임무가 놓여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전 경주 안강농협 조합장)이 작년 12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회장은 12월 27일 있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614표를 얻어, 569표를 얻은 전남 나주 남평농협의 김병원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된 것이다.

총 5명의 조합장 출신 후보가 나선 가운데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선거 과정에서 최원병 신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농업계 내외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점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성실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해 나갔다. 농민연합은 12월 13일(목) “농협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월간 한농연 2007년 12월호 참조), 농협의 조직·사업 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농연도 12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며 올바른 농협 개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은 1월 2일자 특집기사에서 학계·조합장·농민들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원병 신임 회장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꼽았다고 보도하였다. 개방화 시대에 대응, 국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자립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 ‘농협다운 농협’이 될 것과 농정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매 대통령 선거마다 농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은 적이 없고, 역대 정권은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 줄서기를 통한 조직 비호와 투명하지 못한 운영 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350만 농민이 아니라, 정치권의 비호 아래 농협이 있는 게 아니냐는 농민조합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우리 농업문제 해결에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정도로 막중한 자리이다. 12만 농업경영인은 농업문



제의 제1해결 과제로 협동조합 개혁을 뽑는 것에 서슴지 않는다. 최원병 회장 스스로도 “조합장을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농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농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여 우리 농업을 위한 철학과 의지, 약속을 정확하게 밝혀내며 350만 농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에게 바란다

첫째, 농협의 위기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탈(脫) 정치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자기 개혁을 올바로 이끌어 내야 한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협이 ▲비자금 조성 ▲불법대출 사건 ▲친인척 특혜 ▲혈값 처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내사자료를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협 개혁에 대한内外부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비판 없이 조직 보위 차원에서 개혁 작업을 방해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조직을 영위해 나가려는 사람은 또 다시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이미 개방경쟁체제에 돌입한지 오래다. 그러나 농협의 사업은 매번 익숙한 것들—도시민 예금 유치, 금고 방어, 정책자금 지원 창구, 회원조합 자금 지원 및 배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이 경제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한 경제사업에 대한 의미를 농협중앙회 내부부터 인식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에 처한 농협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은 내부 감사시스템 확립을 통한 투명한 운영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 농민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회장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도지역본부장은 마땅히 조합장들이 선출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 이관과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